

KTX·SRT 통합…호남고속철도 좌석 4600석 늘어난다

전국 좌석 1만6000석 증가…결제·발권 시스템 합쳐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연말부터 구분 없이 연결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 계획대로 통합되면, 호남고속철도 좌석 수는 주말기준 하루 평균 4600석 넘

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

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 운영에 나선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던 코레일과 SR도 내년까지 원만하게 합쳐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

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000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000석 등 25만5000석에서 약 6%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호남선은 4684석 증가한다. 서울역 기준 882석, 수서역 기준 3802석이 추가된다.

경부선은 1만127석, 경전선 372석, 동

해선 1316석, 전라선도 191석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이날 "기관 통합의 마무리는 내년 말이지만, 교차 운행 확대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이 조치가 호남선 포함 국민들의 예매 난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지방시대위 업무보고 “새 균형성장 체계 마련할 것”

김경수 “지역은 ‘전략자산’…국토전체 재구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국 제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각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 원장은 “관여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관여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구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매개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관여별 디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확대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와 관련해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했고,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여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 탄핵·AI 혁신 등 큰 변동 담아

민주, 지선 기초비례 ‘50%·50%’ 조정

〈상무위원〉

〈권리당원〉

광역비례는 ‘권리당원 100%’…최고위원 보선 1월 11일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한법제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한다.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현·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종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같이 수정해 보완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밟아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제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위가 넓어 권리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 취지를 살리고자 (광역은 부결된 안건 내용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의 동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투표에서 공천을 개정해 담긴 당현·당규 개정안은 찬성을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 했나”고 밝혔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제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 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현·당규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373명 (62.58%)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지만 의결 기준인 자적 과반 찬성 (299명)에 단 2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회의 공석이 될 때 따라 저리지는 보궐선거를 오는 1월 11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 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신임 민주당당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당원장은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만원주택’ 경쟁률 최대 154대 1

광양·무안 236명 몰려…청년 일반공급 경쟁률 급등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 모집에 총 236명이 신청하며 최고 경쟁률 154대 1을 기록했다. 단기 간 접수에도 청년층이 대거 몰리면서 공급 호수의 20배가 넘는 수요가 확인됐다.

이번 모집은 정부24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이달 1~5일 미비서류 보완 절차가 이어졌다.

신청자는 광양 187명(79%), 무안 49명(21%)으로 두 지역 모두 공급량을 크게 웃돌았다.

광양은 청년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청년 일반공급 경쟁률은 154대 1로 가장 높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1면 ‘전남 섬 방문’서 계속

관광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섬 지역 상권으로 환원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홍보·마케팅 15억원, 섬 관광 프로그램 15억원, 문화행사 10억원, 선포식 5억원 등 국내외 홍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6년은 전남 섬 관광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 고유의 섬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